

ISSUE **PAPER** 2024-05

ISSN 2092-657X

국내 공공기관의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운영·현황

• • • •
2024. 10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요 약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범위 및 내용	2
II. 재정용자 제도의 개요 및 시행 공공기관	3
1. 재정용자 제도의 개요	3
2. 재정용자 제도 시행 공공기관	12
III.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의 추진체계 및 관리	16
1.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의 추진체계	16
2. 재정용자사업의 운영 절차 및 관리	19
IV. 해외의 재정용자 및 이차보전 제도 검토	23
1. 미국의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	23
2. 캐나다의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	26
3. 일본의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	28
4. 프랑스의 재정용자 제도	31
5. 해외 사례의 시사점	34
V. 재정용자·이차보전 운영 및 현황	36
1. 재정용자사업 현황	36
2. 이차보전사업 현황	43
VI.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54
1. 현황분석	54
2. 정책적 시사점	58
참 고 문 헌	60

CONTENTS

표 목 차

■ 표 2-1 ■ 재정용자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비교	4
■ 표 2-2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차이	7
■ 표 2-3 ■ 연도별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방식 지원 규모	8
■ 표 2-4 ■ 재원별 재정용자 지원 규모	8
■ 표 2-5 ■ 분야별 재정용자 지원 규모	9
■ 표 2-6 ■ 분야별 이차보전 지원 규모	10
■ 표 2-7 ■ 소관부처별 재정용자 지원 규모	11
■ 표 2-8 ■ 재정용자사업 단위 및 세부사업 현황	11
■ 표 2-9 ■ 분야별, 소관부처별 재정용자사업	12
■ 표 2-10 ■ 공공기관별 재정용자사업 및 방식	15
■ 표 3-1 ■ 재정용자사업 구성요소별 역할 및 기관(예시)	16
■ 표 3-2 ■ 재정용자사업의 단계적 관리방식 : 예산편성과 심의	19
■ 표 3-3 ■ 재정용자사업의 단계적 관리방식 : 집행과 사후관리	20
■ 표 3-4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유형별 용자지원 방식	21
■ 표 4-1 ■ 미국정부의 직접용자와 신용보증 지원 규모(10억 달러)	24
■ 표 4-2 ■ 미국 재정용자사업 평가항목 및 내용	25
■ 표 4-3 ■ 일본 JFC의 이차보전(Interest subsidies) 지원 실적	30
■ 표 4-4 ■ Bpifrance의 국가보증 대출규모 추이	33
■ 표 5-1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용자 지원 내용(2022년)	38
■ 표 5-2 ■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	39
■ 표 5-3 ■ 환경부 재정용자사업 지원규모 및 조건(2024년 기준)	41
■ 표 5-4 ■ 환경부 용자사업별 사업방식(2022년)	42
■ 표 5-5 ■ 방송영상진흥재단 용자지원 주요 내용(2024년)	42

CONTENTS

표 목 차

■ 표 5-6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편성 현황(2023년)	45
■ 표 5-7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2024년)	46
■ 표 5-8 ■ 이차보전 대출 주요 조건	47
■ 표 5-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차보전과 순수이차보전 방식 비교	48
■ 표 5-10 ■ 보증기금별 이차보전 대상 운영 문화콘텐츠 보증 상품 현황 (2023년 기준)	49
■ 표 5-11 ■ 콘텐츠기업 보증제도 상품구성	50
■ 표 5-12 ■ 방위산업 이차보전 분야별 지원내용 (2021년)	51
■ 표 5-13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금리보전 체계(2021년) ·	53
■ 표 6-1 ■ 소관부처, 공공기관, 사업별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현황 ·	56
■ 표 6-2 ■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제도 비교 및 적용가능 사업	58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2-1】 국가 재정 사업의 분류	4
【그림 2-2】 정부의 재정사업 재원	5
【그림 2-3】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	6
【그림 2-4】 재정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12
【그림 3-1】 직접융자 사업추진체계	17
【그림 3-2a】 간접융자(전대방식) 사업추진체계	17
【그림 3-2b】 간접융자(취급은행+보증) 사업추진체계	17
【그림 3-3a】 이차보전사업추진체계	18
【그림 3-3b】 이차보전(취급은행+보증) 사업추진체계	18
【그림 4-1】 미국의 중소기업 융자보증제도 체계	23
【그림 4-2】 2024년 5월 현재 CEBA 운영 현황	27
【그림 4-3】 일본의 이원적 신용보완제도 체계	29
【그림 4-4】 대출 보증과 CLO에 의한 유동화, 사채의 보증과 CBO에 의한 유동화 · 30	
【그림 4-5】 Bpifrance의 지분구성과 조직	31
【그림 5-1】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진행 절차	37
【그림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체계	37
【그림 5-3】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절차	43
【그림 5-4】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추진체계	44
【그림 5-5】 범부처 정부 R&D 저리융자 특례보증 지원절차	45



요 약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부는 기간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정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융자사업은 국내 다수,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지원 방식과 형태가 서로 달라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중 기술 혁신 및 사업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공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융자 제도는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해 주는 제도

- 국가 재정사업은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출연사업, 국고보조금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재원은 크게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나뉨
- 정부의 자금지원은 직접융자, 전대방식(간접융자),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정부의 재정융자는 41조 6,640억 원, 이차보전은 1조 5,408억 원으로 재정융자가 전체의 96.4%를 차지하며, 전체 자원(회계, 기금) 중 기금의 비중이 98% 이상을 차지

- 재정융자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사회복지분야가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가 각각 약 20%, 8%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농림수산 분야가 38%로 나타남

- 재정용자사업의 소관부처별 규모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4조 3,465억 원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7조 2,14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3조 2,386억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732억 원의 용자금을 지원

■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의 특징에 따라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 통일외교, 문화 및 관광, 환경, 교육, 국방, 통신, 일반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재정용자사업 분야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통신분야, 환경분야 등이 대표적임
-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용자 예산은 7조 2,144억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732억 원 규모임
- 국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전대(간접용자) 방식을 통해 재정용자 및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직접용자 방식 또는 직접용자와 간접용자를 혼합한 형태의 금융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의 구성요소로는 주무부처, 전문기관, 취급은행, 보증기관, 수혜자(개인·기업) 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는 사업계획 수립, 지침마련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또는 전담기관)은 취급은행 관리, 용자금 대여 및 회수 등, 취급은행은 대출금지급 및 회수, 채권보전 등, 보증기관은 보증심사, 기업선정 등, 그리고 수혜자(개인 또는 기업)는 사업 신청, 원리금 상환 등의 역할을 수행 및 담당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은 신용대출, 물적담보대출, 보증부 대출에 의한 직접 및 간접용자, 이차보전 등 지원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추진체계를 가짐

■ **우리나라의 재정용자사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재정용자사업의 주요 관리·운영 절차는 재정용자사업의 계획 단계인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단계와 예산편성 후의 사업을 실행하는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
- 예산안 편성과 심의 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안 제출, 기획재정부의 용자조건 협의 등 정부안 심의, 국회에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확정, 각부처의 사업추진 등의 절차를 거침
- 집행과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사업취급기관이 사업공고, 용자 신청 및 접수, 용자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용자를 실행하며, 이후 용자 방식(직접 용자, 간접용자, 이차보전, 신용보증)에 따라 담당 기관별로 사후관리를 수행

■ **본고는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을 위주로 국내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음**

- 주요 공공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국방부) 등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용자와 간접(또는 대리)용자, 직·간접 혼합 방식으로 재정용자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간접용자(전대) 방식으로 금융을 지원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용자 또는 이차보전 중 하나의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녹색전환-오염 방지시설자금)의 경우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의 간접용자 방식에서는 보증기관을 통해 취급은행의 위험을 낮추고 있으며, 일부 시급성이 높은 사업(예, 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R&D 혁신스케일업 용자(이차보전)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 중임

■ 국내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사업 현황 분석 결과

● 재정융자 제도 현황 분석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간접융자 방식으로 재정융자 제도를 시행 중(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융자, 직·간접융자 방식)
- 공공기관별 개별 법령을 적용, 지원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기한, 융자금리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융자한도, 융자금리 등을 차등화하는 사례도 있음

● 이차보전 제도 현황 분석

- 순수 이차보전, 복합 이차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 중
- 융자금액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방식과 기업규모, 융자금액, 인증등급, 지원업종 등에 따라 차등하여 이차보전해 주는 방식 등 기관별로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음

■ 정책 시사점

● 지원 사업목적에 맞춰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

-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제도의 적용 사례와 특징을 고려하여 경제상황과 정책목표에 따라 각 제도를 적절히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사업에 보증 제도 활용

- 공적보증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완화하여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사업의 효과(특히, 융자대상 확대 및 다변화)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정부 재정지원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을 특색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정책목표 달성 정도가 높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재정융자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수출 금액이나 인증 레벨 등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

연구개요

I.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재정용자사업은 시대에 따라 경제상황과 정부가 세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분야를 달리하며 변천하여 왔음¹⁾
 - 경제성장기에는 기간산업육성, 농업구조 개선과 수출산업 진흥 등이 주요 목표이었으나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주택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개발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음
 - 이후에는 특별회계를 통한 용자지원은 감소하고,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등 개별 기금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경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원 중임
- 정부는 기간산업·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재정용자를 지원 중이나, 재정용자사업은 법적 근거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지원방식과 지원형태가 다양하여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행 법령상 재정용자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추진시 근거를 예산이나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거나 개별 법령에 ‘용자가능’이라는 형태로 근거를 규정 중
 - 결과적으로 재정용자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제외한 각 소관부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측정할 정보가 일원화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 한국재정정보원(2019), “재정용자사업 이해하기”, pp.28~35.

■ 연구 필요성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다양한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2 연구목적, 범위 및 내용

■ 연구 목적

- 기술·사업화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다양한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의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이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의 재정용자 및 이차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연구 범위 및 내용

- 연구범위
 - 국가 재정사업(재정용자, 이차보전, 출연, 국고보조금사업) 중 재정용자 및 이차보전사업
 - 다양한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분야 중 기술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된 사업분야
- 연구내용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의 개요(정의, 지원방식, 지원분야, 지원규모 등), 시행 공공기관, 사업추진체계 및 관리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 기술개발·사업화 관련 국내 공공기관의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사업의 추진체계,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위주 국내 공공기관의 재정용자·이차보전 제도 운영 및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재정융자 제도의 개요 및 시행 공공기관

II.1

재정융자 제도의 개요

■ 재정융자 제도의 정의

- 재정융자 제도는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해 주는 제도
 - 현행 법령상 재정융자 제도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편(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제2장(실체규정)에서 융자의 의미, 근거 등을 설명하고 있음

〈참고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융자의 의의²⁾

자금의 '융자'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저리자금의 융자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국가의 재정³⁾사업은 정부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국가 재정사업은 크게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사업, 출연사업, 국고보조금사업 등으로 구분됨
 - 재정융자사업은 공공목적을 위해 정부 외의 대상에게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나 융자 수혜자에게 자금대여 후 회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법제처(2023), “법령 입안 심사 기준”, pp272~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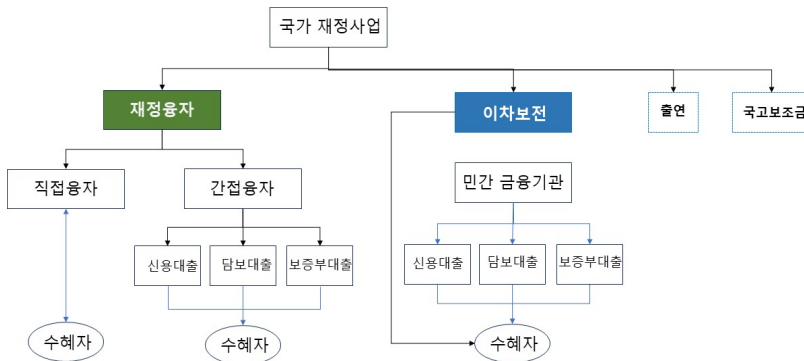
3) 정부는 조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재정이라고 함. 열린재정, 재정 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참조.

■ 표 2-1 ■ 재정융자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비교

구분	재정융자	국고보조	출연
개념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대상에게 융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법률에 근거해 재정을 지원
지원방식	융자금 지원 후 융자원금과 이자 상환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일반 법적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없음
개별 법적근거	불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필요
용도 지정여부 (사용용도)	비지정 - 융자계약서 등에 사용용도 한정	사용용도 지정 (집행상의 재량 없음) - 교부조건 등에 사용용도 한정	기관출연금(비지정) 목적출연금(지정) -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포괄지원과 특정 사업 등 사용용도 지정 방식 혼용
지원대상	개인, 법인 등 융자금 신청자 중 사업 성격들을 고려하여 선정	사업자(단체), 지자체 등 보조금 신청자 중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기금·공단 등 정부 출연기관
사후관리	상환, 이자 지급	사후정산 필요 (집행잔액 반환)	사후정산 불필요

출처: 박정화(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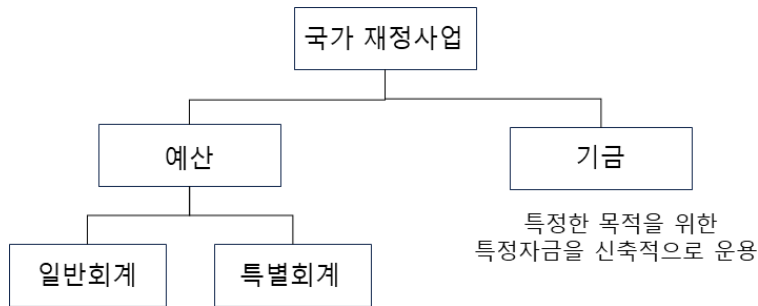
- 재정융자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융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차보전은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고 정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경제 활성화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



【그림 2-1】 국가 재정 사업의 분류

출처: 저자 작성

- 국가 재정사업의 재원은 크게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
 - 정부의 재정 활동은 주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에 의하여 운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 국가 고유의 일반재정활동은 일반회계에서 수행하고,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
 - 그리고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되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고,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며, 사업의 특성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을 가짐⁴⁾
 - 기금의 경우 자체수입, 용자지원금 회수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자금을 조성, 적립해 운용할 수 있는 반면, 예산의 경우 주로 조세를 재원으로 사용되며,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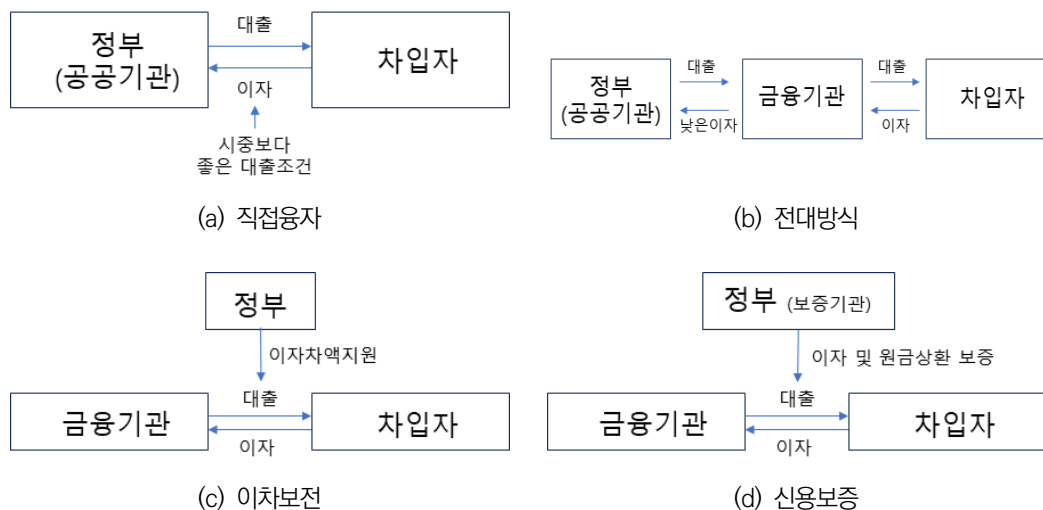
【그림 2-2】 정부의 재정사업 자원

출처: 저자 작성

- 정부의 자금지원은 직접융자, 간접융자(전대방식),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⁵⁾

4) 김선옥(2018.12),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p3.

5) 김지영·박상원(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P.21와 한국재정정보원 (2019), “2023 주요 재정통계” 참조.



【그림 2-3】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19), 태정임(2009)

- (직접용자, Direct Loan) 소관부처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용자 수혜자에게 직접 용자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자금 조성에서부터 용자대상 조건, 용자 대상자 선발까지 직접 수행

- 지급불능(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재정 손실은 정부의 몫

* 사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부분 재정용자사업

- (간접용자, On Lend) 정부가 시중은행 또는 공공기관에 용자금을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대행하여 수혜자에게 용자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여 공급한다는 점에서 직접용자와 유사하나 해당 금융기관이 용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실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차이

- 대출금리 = 정부 정책금리(용자금리) + 가산금리(금융기관 일정 수수료)

*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사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간접용자 방식 활용

- (이차보전, Interest Subsidy) 민간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으로 정책 수혜자에게 용자해 주고 정부는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를 민간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용자와 구분

- 지급불능에 따른 재정 손실은 금융기관의 몫

*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R&D 혁신스케일업 용자(이차보전) 사업

- (신용보증, Loan Guarantee) 차입자의 자금상환을 일정부분 정부(보증기관)가 금융기관에 보장하는 제도로써,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보증기관이 발행한 정부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제도
 - 지급불능에 따른 손실은 금융기관의 부담이나 보증처인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정부로부터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분을 얻게 되므로 차입자에 대한 대출 유인이 증가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 표 2-2 ■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차이

구분	재정융자		이차보전
	직접융자	전대방식	
자금조달 주체	정부 등 사업주관기관	정부 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취급기관 (금융기관)
대출주체		사업취급기관 (금융기관)	
대출금리 결정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
대출심사 주체		사업취급기관 (금융기관)	사업 취급기관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주체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없음	없음	있음
대출취급기관의 수익	없음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차이 또는 위탁수수료	이차보전액+대출대상자 이자 납부액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19), 삼일회계법인(2022)을 기초로 저자 작성

-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재정사업의 분류 중 국내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의 운영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정부가 직접 융자금을 공급하지는 않으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설정된 대출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함으로써 정책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재정융자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함
 - 즉,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을 상환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융자 방식과 차이를 보이나, 사업의 취지가 재정융자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융자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음

■ 재정용자 규모

- 정부의 재정용자(직접용자 및 전대)와 이차보전 방식을 통한 재정지원 규모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총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이며(2022년, 2023년은 감소), 재정용자가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

■ 표 2-3 ■ 연도별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방식 지원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정용자 (비율)	323,913 (98.6%)	339,009 (98.7%)	372,706 (97.8%)	446,182 (98.4%)	476,709 (98.4%)	466,195 (98.1%)	416,640 (96.4%)
이차보전 (비율)	4,546 (1.4%)	4,495 (1.3%)	8,340 (2.2%)	7,197 (1.6%)	7,802 (1.6%)	9,110 (1.9%)	15,408 (3.6%)
합계	328,459	343,504	381,046	453,379	484,511	475,305	432,048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23), 2019년 이전 자료는 삼일회계법인(2022)

- 재정용자사업의 재원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
 - 전체 재원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8%로, 기금이 재정용자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방식
 - 기금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므로 재정용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반면, 특별회계는 특정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금 사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표 2-4 ■ 재원별 재정용자 지원 규모

(단위 : 조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금 (비율)	36.7 (98.7%)	43.8 (98.0%)	46.6 (97.9%)	45.7 (98.1%)	40.9 (98.1%)
특별회계 (비율)	0.5 (1.3%)	0.9 (2.0%)	1.0 (2.1%)	0.9 (1.9%)	0.8 (1.9%)
합계	37.2	44.7	47.6	46.6	41.7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23)

● 분야별로 살펴보면,

- 재정용자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이 속하는 사회복지 분야가 60% 이상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가 각각 약 20%, 8%를 차지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이므로 주거 안정 등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재정용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표 2-5 ■ 분야별 재정용자 지원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회복지	금액	286,181	289,012	268,633	302,476
	비율	60.0%	62.0%	64.5%	61.3%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금액	107,339	105,581	83,326	93,110
	비율	22.5%	22.6%	20.0%	18.9%
농림수산	금액	38,272	39,882	36,407	39,225
	비율	8.0%	8.6%	8.7%	7.9%
통일외교	금액	12,290	16,249	17,013	21,466
	비율	2.6%	3.5%	4.1%	4.3%
문화 및 관광	금액	6,008	8,560	5,406	7,124
	비율	1.3%	1.8%	1.3%	1.4%
환경	금액	5,014	4,423	3,711	3,200
	비율	1.1%	0.9%	0.9%	0.6%
교육	금액	1,175	1,959	1,699	1,021
	비율	0.2%	0.4%	0.4%	0.2%
국방	금액	216	265	220	180
	비율	0.0%	0.1%	0.1%	0.0%
통신	금액	256	164	125	0
	비율	0.1%	0.0%	0.0%	0.0%
일반지방행정	금액	19,956	100	100	26,000
	비율	4.2%	0.0%	0.0%	5.3%
합계	금액	476,707	466,195	416,640	493,802
	비율	100.0%	100.0%	100.0%	100.0%

출처: 2021~2023년도 자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공공데이터포털 업로드 자료
2024년 자료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이차보전의 경우, 2024년 기준 사회복지분야가 1조 4,155억 원으로 60%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 분야가 6,956억 원으로 29.5%를 차지

■ 표 2-6 ■ 분야별 이차보전 지원 규모

(단위 :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회복지	금액	3,581	5,062	7,767	14,155
	비율	45.9%	46.8%	50.4%	60.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금액	14	1,038	198	629
	비율	0.2%	9.6%	1.3%	2.7%
농림수산	금액	3,361	3,516	5,873	6,956
	비율	43.1%	32.5%	38.1%	29.5%
통일외교	금액	0	0	6	5
	비율	0.0%	0.0%	0.0%	0.0%
문화 및 관광	금액	16	224	104	159
	비율	0.2%	2.1%	0.7%	0.7%
환경	금액	111	121	477	641
	비율	1.4%	1.1%	3.1%	2.7%
교육	금액	0	0	0	0
	비율	0.0%	0.0%	0.0%	0.0%
국방	금액	443	532	586	703
	비율	5.7%	4.9%	3.8%	3.0%
통신	금액	0	0	0	0
	비율	0.0%	0.0%	0.0%	0.0%
교통 및 물류	금액	207	245	312	269
	비율	2.7%	2.3%	2.0%	1.1%
국토 및 지역개발	금액	67	68	81	64
	비율	0.9%	0.6%	0.5%	0.3%
공공질서 및 안전	금액	1	2	4	8
	비율	0.0%	0.0%	0.0%	0.0%
합계	금액	7,801	10,808	15,408	23,589
	비율	100.0%	100.0%	100.0%	100.0%

출처: 2021~2023년도 자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공공데이터포털 업로드 자료
2024년 자료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재정용자사업의 소관부처별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4조 3,465억 원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7조 2,14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3조 2,386억 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9,732억 원의 용자사업을 수행

■ 표 2-7 ■ 소관부처별 재정용자 지원 규모

(단위 : 백만 원)

소관	2021년	2022년	2023년
기획예산처	3,360,996	1,544,823	1,759,096
교육부	1,301,412	1,083,707	923,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89	16,388	12,455
통일부	281,437	291,514	198,307
국방부	28,106	26,466	21,984
문화체육관광부	723,100	856,000	540,600
농림축산식품부	3,385,993	3,555,997	3,238,674
산업통상자원부	975,584	1,110,632	973,196
보건복지부	59,964	49,888	44,727
환경부	611,078	390,000	270,000
고용노동부	720,565	657,343	623,925
국토교통부	24,476,784	26,117,635	24,346,579
해양수산부	367,416	354,297	403,172
중소벤처기업부	9,810,000	9,297,500	7,214,400
국가보훈부	28,494	28,894	27,148
인사혁신처	1,364,565	1,158,258	1,066,491
산림청	128,000	80,189	-
합계	47,649,083	46,619,531	41,664,004

출처: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 재정용자사업은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를 통해 이루어지며, 2023년 기준 단위사업은 80개, 세부사업은 115개 수행

■ 표 2-8 ■ 재정용자사업 단위 및 세부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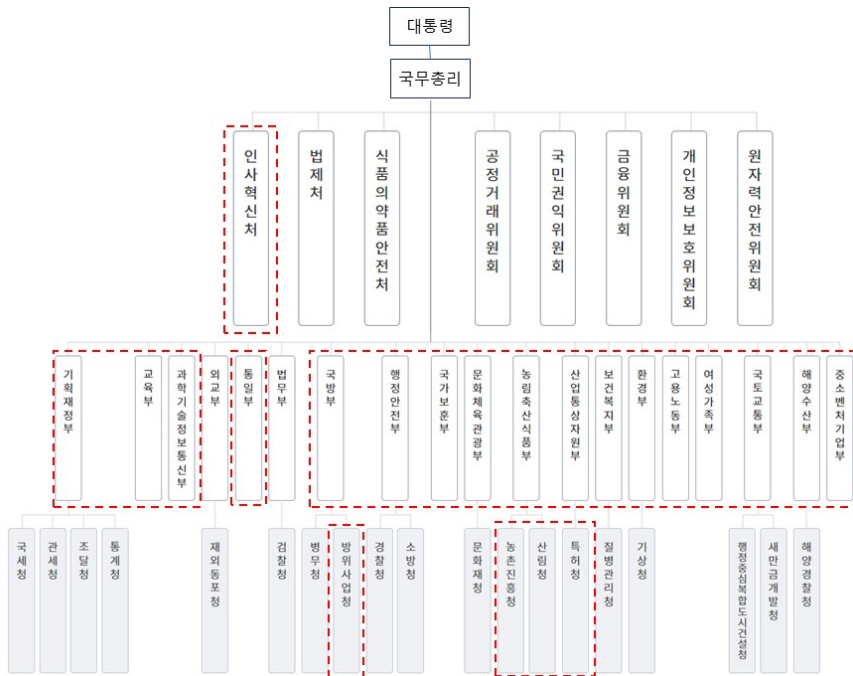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사업수(개)	77	79	80
세부 사업수(개)	110	112	115
세출예산액(억 원)	476,491	466,195	416,640

출처: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II.2 재정용자 제도 시행 공공기관

■ 재정용자사업 수행 정부부처

-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수행 정부부처
 -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시행



【그림 2-4】 재정용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출처: 정부조직도는 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빨간 점선 박스 내 부처는 재정용자 또는 이차보전사업 시행 부처

- 분야별, 정부부처별 주요 재정용자사업은 다음과 같음(2019년 기준)

■ 표 2-9 ■ 분야별, 소관부처별 재정용자사업

순번	분야	소관	회계명	세부사업명	주요 법률근거
1	사회복지 분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시기금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16건	주택도시시기금법, 공공주택특별법
		교육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생활안정자금대여 등 3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순번	분야	소관	회계명	세부사업명	주요 법률근거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대부, 대여학자금용자	공무원연금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산재예방시설용자 등 6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노후연금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법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용자 등 2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민간보육시설지원 등 3건	보훈기금법
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산업통상 자원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절약시설장치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가스안전관리	
3	농림수산	농림축산 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산지유통종합자금 등 31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해양수산부	수산물발전기금 등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 등 7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산림사업종합자금 (용자금) 등 3건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4	통일외교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아 차관 등 6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경제교류협력대출 등 3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5	문화 및 관광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3건	관광산업 용자지원 등 3건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영요령
6	교육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등 3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순번	분야	소관	회계명	세부사업명	주요 법률근거
7	환경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재활용산업육성 용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 민간용자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8	일반지방 행정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9	국방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학자금 대부 등 2건	군인복지기금법
10	통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용자)사업 관리요령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19), 주요 법률근거는 저자 추가

■ 공공기관의 재정용자사업 및 방식

● 기술·사업화 관련 재정용자사업

- 기술·사업화 관련 재정용자사업은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사업은 주로 기술개발(R&D), 사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 성장 등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함
-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재정용자사업 분야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통신분야, 환경분야 등이 대표적임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용자 예산 규모는 49조 3,802억 원이며, 이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9조 3,110억 원으로 전체의 18.9%에 해당(환경분야 64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9억 원 수준)
-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분야에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용자 예산은 7조 2,144억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732억 원 규모(2023년 기준)
- 금융지원 방식은 용자 또는 이차보전 방식이며, 운영 형태는 대리용자(전대)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직접용자와 대리용자를 혼합하여 활용

■ 표 2-10 ■ 공공기관별 재정용자사업 및 방식

순번	소관부처	산하기관	사업명	재정용자 방식
1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사업	대리용자
			R&D 혁신스케일업 용자(이차보전) 사업	이차보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대리용자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 지원 & 이차보전	대리용자, 이차보전
2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 사업화	직접/대리용자
			신시장진출 지원	직접/대리용자, 이차보전
			신성장기반	직접/대리용자, 이차보전
			재도약지원	직접/대리용자
			긴급경영 안정	직접/대리용자
			밸류체인 안정화	직접/대리용자
			정부 R&D 과제비 감액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대리용자
4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진흥재원 용자지원 사업	대리용자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5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사업(환경산업, 녹색전환사업)	대리용자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용자사업	대리용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6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이차보전 용자사업	이차보전
7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한국해운조합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
8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이차보전
9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이차보전
1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유도선안전협회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출처: 저자 작성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의 추진체계 및 관리

III.1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의 추진체계

■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구성 및 역할

●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구성요소

- 주요 구성요소로는 주무부처, 전문기관(또는 전담기관), 취급은행, 보증기관, 용자 수혜자(또는 기관) 등을 들 수 있음

〈참고 2〉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 주무부처 : 해당 사업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예,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또는 전담)기관 : 정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립 또는 지정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수행(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취급은행 : 재정용자사업 등에서 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담당, 주무부처나 전문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는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예, IBK기업은행)
- 보증기관 : 금융 거래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안전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보증기관은 대출이 불이행될 경우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책임을 짐(예, 기술보증기금)
- 수혜자(또는 기관) : 주무부처나 전문기관의 재정용자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이나 법인 등 기업

● 구성요소별 역할 및 기관(예시)

■ 표 3-1 ■ 재정용자사업 구성요소별 역할 및 기관(예시)

구분	주무부처	전문기관	취급은행	보증기관	용자 수혜자
역할	• 사업계획 수립 • 지침마련 • 융자한도액 배정 • 사후관리 (점검확인지도 감독)	•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 융자금 대여 • 융자금 회수 • 융자금 실태조사 • 사후관리	• 대출금 지급 • 대출원리금 회수 • 대출금 채권보전 • 사후관리	• 보증심사 • 기업선정 • 사후관리	• 사업신청 • 원리금 상환
기관 (예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IBK기업은행 등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보증기관	개인(개인사업자), 기업(법인)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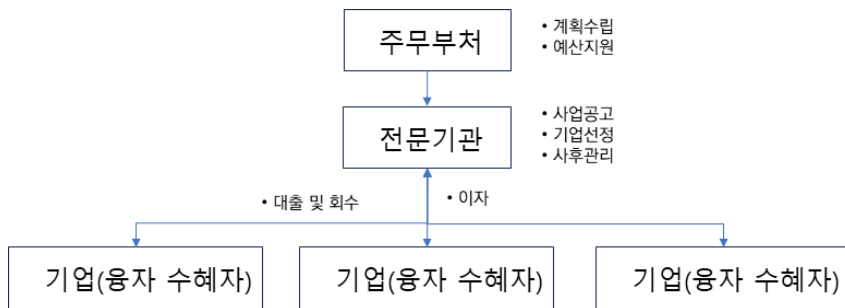
■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추진체계

● 지원방식별 사업추진체계

① 직접용자

- 전문기관이 용자 수혜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

* 사례 : 중소벤처기업부(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문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정용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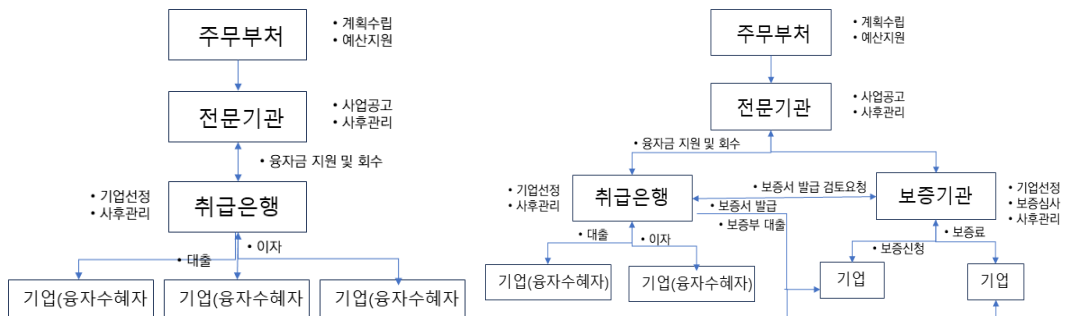
【그림 3-1】 직접용자 사업추진체계

출처: 저자 작성

② 간접용자(전대방식)

- (i) 전문기관을 대리하여 취급은행이 용자 수혜자에게 용자금 지급(대부분의 재정용자 방식)

*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사업



【그림 3-2a】 간접용자(전대방식) 사업추진체계 【그림 3-2b】 간접용자(취급은행+보증)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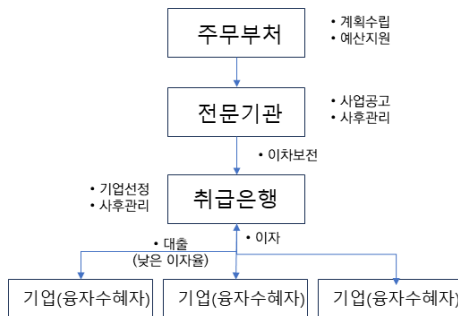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ii)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취급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융자금 지급
(대부분의 재정융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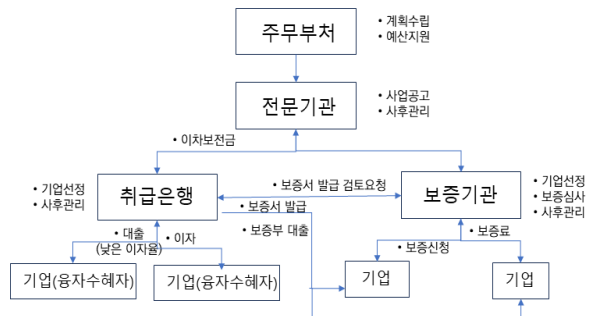
*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문기관)의 정보통신융용 기술개발지원사업

③ 이차보전

- (i) 취급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융자한 후 주무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대출자(차입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 주는 방식
- (ii)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취급은행이 자기자금으로 융자한 후 주무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대출자(차입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 주는 방식



【그림 3-3a】 이차보전사업추진체계



【그림 3-3b】 이차보전(취급은행+보증)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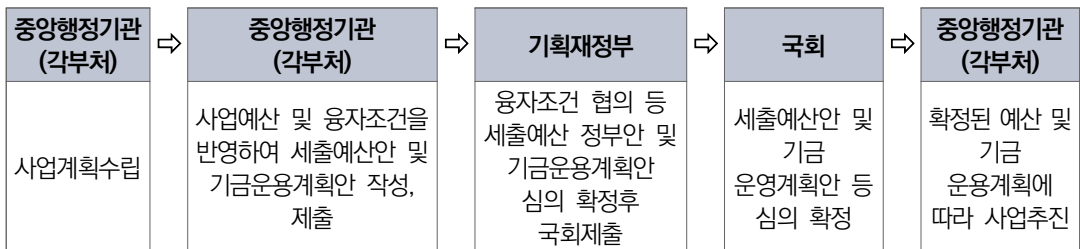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III.2 재정용자사업의 운영 절차 및 관리

■ 재정용자사업의 운영 절차

- 재정용자사업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 재정용자사업의 주요 관리·운영 절차는 (i) 재정용자사업의 계획 단계인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단계와 (ii) 예산편성 후의 사업을 실행하는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단계
 - 사업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액과 융자금리, 상환기간 등의 융자 조건을 결정함.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⁶⁾
 - 각 사업의 융자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사업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하며, 융자기간은 투자회수기간 또는 손익분기점, 융자지원 대상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표 3-2 ■ 재정용자사업의 단계적 관리방식 : 예산편성과 심의



출처: 한국재정정보원(2019)

-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
 - 재정용자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유형별로 사업 주관기관 또는 사업 취급기관이 사업공고,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융자를 실행(집행)하게 됨

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2항(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제9호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재정용자사업의 계획 및 자금 마련은 정부가 수행하지만 집행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 각 용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관을 두며, 이에 용자자금을 관리하는 공단, 공사, 협회 등을 설립하여 운영
- 재정용자사업 실행(집행) 역시 각 법령에 따라 추진되며, 직접용자·전대·이차보전 방식 등 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관리절차와 사업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

■ 표 3-3 ■ 재정용자사업의 단계적 관리방식 : 집행과 사후관리

유형별 단계별	집행(실행)				사후관리	
	사업 공고	용자신청 접수	용자심사	용자실행	부실채권 처리주체	대출 사후관리
직접용자	사업 주관기관(정부)					
전대	사업 주관 기관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등이 대상자 추천 후 사업취급기관이 최종 결정하는 형태가 대다수	사업 취급기관이 사업주관 기관에 자금대여 신청 후 사업비가 대여되면 이를 통해 용자 대상자에게 용자금을 지급	사업취급기관 (수탁 금융기관)	
이차보전	사업 취급기관			사업 취급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용자금 지급	사업취급기관 (민간 금융기관)	

출처: 박정화(2023), p31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사례

(i) 집행(실행) 단계

- (직접대출 또는 전대) 사업운용주체인 중진공이 관련 용자사업을 공고한 후 신청자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 및 결정통보, 마지막으로 중진공은 자금관리를 맡긴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용자 지원
- (이차보전) 용자 대상자인 중소기업이 사업 취급기관(중진공)과 이차보전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후, 취급기관은 심사 및 적합자에게 대출 등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처리

■ 표 3-4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유형별 융자지원 방식

융자 방식	설명	세부 지원 방식
직접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구분 직접 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령
대리 대출 (전대)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등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3.8)

(ii) 사후관리 단계

- (직접융자방식) 사업 주관기관(정부)이 부실채권의 처리 주체이기 때문에 융자 원리금 미회수가 확정될 때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대방식)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주체가 사업 취급기관(금융기관)이므로 융자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주지 않음. 이는 사업 취급기관이 사업 주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에 융자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조치가 따르기 때문임
- (이차보전) 전대 방식과 달리 사업 취급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융자를 실행(집행) 하기에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재정과는 무관

■ 재정용자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⁷⁾

● 재정용자관리 시스템

- 관리절차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하여 회계와 기금에 각각 예산이 배정되면, 재정용자사업은 dBrain+⁸⁾ 또는 자체 구축한 용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됨
- 용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중 dBrain+을 직접 사용하는 11개 소관, 20개 회계·기금, 1개 연계기관이 dBrain+을 통해 재정용자사업의 집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 이외에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추진기관⁹⁾은 자체 용자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중은행을 통하여 집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음

7) 박정화(2023), “재정용자사업 관리현황 및 개선과제”.

8)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fis.kr>.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기부)의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 한국에너지공단(산업부) 올인원자금용자시스템,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한국과학진흥재단(교육부) 용자시스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 종합지원시스템 등.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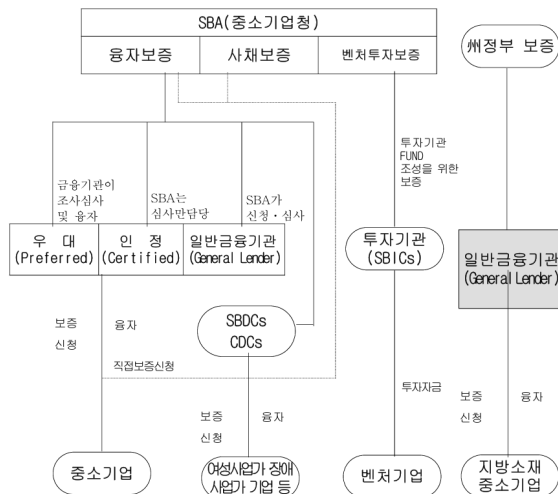
해외의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 제도 검토

IV.1

미국의 재정융자와 이차보전 제도

■ 미국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더 용이하게 하는 다수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운영중

- 미국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은 대출, 투자, 보증, 보조금 및 재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을 시행
 - SBA의 대출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형태이며, 투자는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가 대출 혹은 자본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짐
 - 이외에도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 보증 증권 발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재보증, 연구개발이나 수출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정책금융을 시행



【그림 4-1】 미국의 중소기업 융자보증제도 체계

출처: 김혁 외(2004)

■ 미국의 재정융자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재난 구조, 교육, 주택 및 퇴역 군인을 위한 대출이 주된 영역으로, 직접융자와 신용보증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¹⁰⁾

- 직접융자의 형태보다 신용보증의 지원 규모가 더 큰데, 그 이유는 미국의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이 신용보증을 통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보다 더 큰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융자보다 신용보증의 사용을 권장하기 때문
- 재정융자사업의 예로는 학자금대출, 주택 대출, 주택 개선 대출, 재해 관련 대출, 중소기업 대출이 있음

■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은 인디언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인디언 원주민이 기업 창업 또는 자본조달을 위해 대출기관에서 대출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신용보증, 보험, 이차보전을 제공
- 최초 이차보전 기간은 3년이며, 2년간 연장 가능

■ 표 4-1 ■ 미국정부의 직접융자와 신용보증 지원 규모(10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접 융자	계획	174.4	174	181.3	175.6	180.0	169.7	173.6	558.9	235.7	310.4	211.0
	지출	157.5	155.4	161.4	158.5	164.4	151.9	150.8	418.4	198.8	253.7	189.2
신용 보증	계획	536.6	350.8	478.3	537.6	530.2	461.7	491.1	1,305.5	1,185.6	793.4	721.4
	지출	491.3	335.6	461.6	517.6	520.6	465.1	482.7	1,287.9	1,176.9	794.3	720.7

출처: The White House(2023), p.274. Table 19-4.

- 미국의 직접융자 규모는 지출 기준으로 이전에는 1,500~1,600억 달러 수준을 지속하다 2020년 4,184억 원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신용보증 역시 지출 기준으로 4,000~5,00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1조 2,879억 원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0) 이장욱(2020),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pp. 17~18.

■ 미국의 재정융자사업은 공개 평가를 통해 일관되고 통합된 관리체계 아래에서 운영

● 융자사업 평가 항목

- 미국 연방정부의 대통령 직속 기관인 OMB에서 연방 예산 및 정책의 준비, 실행, 평가를 담당
- 미국 정부는 융자사업의 소요예산과 지원의 필요성을 매 2년마다 점검
- 각 융자사업의 담당 부처는 OMB의 사업점검계획에 따라 사업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표 4-2 ■ 미국 재정융자사업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내용
관련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융자가 필요한 이유가 설명 되어 있는지	• 연방정부 신용정책 개혁법에 근거한 직접융자사업 연장에 대한 승인이 있는지 • 자본시장 왜곡(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 대출자 또는 여타 수혜자들을 지원하거나 특정한 경제활동을 장려할 사유가 충분한지
해당사업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율은 적절한지	• 이자율과 수수료는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는지 •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이자는 절대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국채발행 금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대출 조건은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 융자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연방정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 대출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정부의 채권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출처: 임소영(2014)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감사원(2016)의 p14 <표 7>을 재인용

● 재정융자사업의 관리체계와 정보 공개 정책

- 미국의 재정융자사업은 일관되고 통합된 관리체계 아래에서 운영
- OMB는 재정융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부처의 역할, 사업의 평가 및 집행 등)과 예산 설명서(Analytical Perspective)를 통해 매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정보(재정융자 규모, 채무잔액, 사업별 재정정보조율, 재정정보조 비용)를 제시
- 미국 연방정부는 「Federal Credit Reform Act」를 제정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제 정책 수혜자에게 주는 혜택과 그에 따른 비용의 크기를 평가
- 또한 USA Spending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재정융자사업에 관련한 정보는 주 및 지역구별 수혜 규모, 연방정부 기관별 지출규모, 수령기관의 이름, 수혜기간 및 수령액, 예산과목 구조에 따른 분야-부문-프로그램별 정부지출 규모와 회계 계정별, 비목별 분류에 따른 지출규모 등

IV.2 캐나다의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

■ 캐나다의 기업 대상 정책금융은 캐나다 기업 개발 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

- BDC는 1944년 산업개발은행(Industrial Development Bank, IDB)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현재의 BDC로 변경¹¹⁾
 -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문업무를 수행하는데, 최근 벤처캐피탈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캐나다의 혁신 장려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등 벤처투자* 업무를 확장
- * IT, 의료, 청정(Clean) 및 에너지 기술, 여성 기술(Women in technology), 산업 부문의 혁신적인 141개 회사에 직접 투자하였으며, 76개의 펀드를 통해 705개의 기술 회사에 간접투자
-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최대 10만 캐나다 달러를 한도로 대출하는 중소기업 대출(Small Business Loan)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 용자,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장비 구매 용자, 기술 용자 등이 있음¹²⁾
 - 상업용 부동산 용자, 장비 구매 용자, 기술 용자는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 적용

■ 캐나다의 대표적인 재정용자 프로그램으로 도제과정 학자금 융자(Canada Apprenticeship Loan, CAL)를 들 수 있음

- CAL은 경제발전 실행계획 2014(Economic Action Plan 2014)에 근거하여 Red Seal 과정¹³⁾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최대 4,000 캐나다 달러) 지원
- 연간 26,000명 이상이 지원함에 따라, 총 1억 캐나다 달러 이상의 지원금액이 발생하고, 대출에 따른 순비용은 매년 1,520만 캐나다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11) 서대훈(2019), “개발금융기관의 현황 및 선진국 개발금융기관의 변화”, p.55.

12) 이장욱(2020),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pp.18~19.

13) 캐나다의 red seal 제도는 기술분야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자, 일종의 국가 자격증을 의미함.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Red Seal 과정을 지역 칼리지 등에서 이수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함. <https://www.red-seal.ca/eng/about/pr.4gr.1m.shtml> 참조

- 2020년 3월,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캐나다 긴급 비즈니스 회계 프로그램(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을 설립
 - 중소기업과 비영리 기관에게 긴급 융자금 6만 CAD를 지급하는데, 대출 초기에는 무이자, 이후부터는 5%의 이자율을 적용 대출을 실행



【그림 4-2】 2024년 5월 현재 CEBA 운영 현황

출처: <https://ceba-cuec.ca/en/overview.html>

■ 캐나다의 이차보전사업으로는 현금선급금 지원 프로그램(Advance Payments Program)을 들 수 있음

- 곡물, 축산, 과수 등 농축산물이 수확 후 판매되지 않을 때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현금선급금을 대출하고 정부는 신용보증과 함께 일부 이자를 대납
 - 농업 마케팅 프로그램법(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 Act)에 따라 정부는 매 생산 기간마다 생산자가 지정된 대출기관에서 받은 현금선급금 중 10만 캐나다 달러에 대한 이자 지원

IV.3 일본의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

■ 일본은 일본정책금융공고(Japan Finance Corporation, JFC)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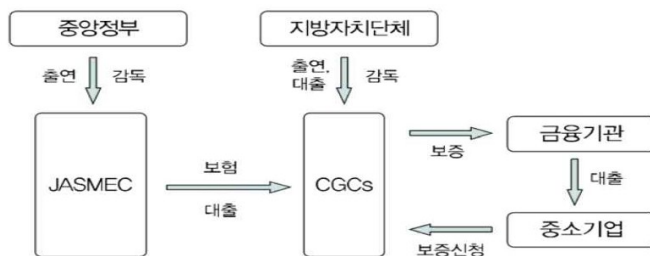
- 2006년 행정개혁추진법의 제정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은 5개 기관으로 재편¹⁴⁾
 - 1936년 상공조합중앙금고를 시작으로 소규모·영세사업자, 농림수산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및 인프라, 수출입금융 등 주요 사업대상에 따라 개별 기관을 설립하여 금융지원 수행
 - 90년대 들어 재정투융자제도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 제도의 운용 측면을 담당하던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상 비효율성, 과도한 자금지출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
 - 이에 따라, 일본의 정책금융기관은 일본정책금융공고, 일본정책투자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 DBJ), 상공조합중앙금고(Shoko Chukin Bank, SCB),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Okinawa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ODFC)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5개 기관으로 재편
 - 특히 JFC는 개인, 농림수산업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 채무 재보증, 금융시장 혼란 내지 천재지변 발생시 위기대응업무 등 취급
- JFC는 대출, 신용보험, 증권화 지원 등의 형태로 정책금융을 지원¹⁵⁾
 - 대출은 중소기업에 장기 고정 금리의 융자,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보증인 신용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실행한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의 매입, 보증 또는 채권 담보화 등의 방식을 통한 증권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

14) 윤경수(2017), “일본 대내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추진 동향 및 시사점 - JFC·DBJ를 중심으로”, pp.56~57.

15) 이장욱(2020),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pp.18~19.

■ 일본의 재정융자 제도는 민간 소비 활성화, 기업금융 지원, 교육·복지·의료 서비스 지원, 고속도로·도시재생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¹⁶⁾

- 경기침체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혁을 2008년에 시행
 - 국민생활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 등 5개 기관을 통합하여 국민일반, 중소기업, 농림수산업자 등 이용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갖춘 JFC를 출범
- 일본의 재정융자 제도는 공공 금융기관이나 공단 등의 조직을 통해 융자 자금을 대상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재정융자사업 취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재정융자사업 취급 공공기관이 재정융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때, 해당 재정융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투입되는 사업비용의 현재가치 및 현금흐름을 추계하여 추정 채권 발행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위험도를 고려¹⁷⁾
 -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중소기업사업단(Jap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rporation, JASMEC)은 신용보증회사(Credit Guarantee Corporations, CGCs)에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CGCs는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이원적인 신용보완제도를 구성



【그림 4-3】 일본의 이원적 신용보완제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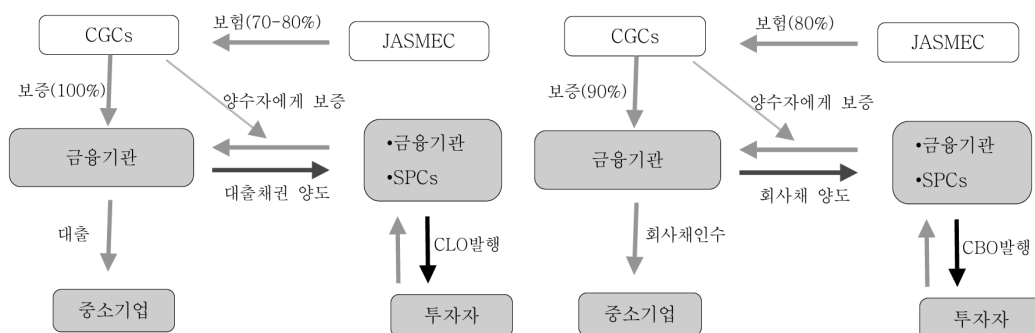
출처: 김혁 외(2004), 삼일회계법인(2022.5)에서 재인용

16) 삼일회계법인(2022), “재정융자제도 및 이차보전 전환사업 분석”, p.57.

17) 박정화(2023), “재정융자사업 관리현황 및 개선과제”, pp.16~17.

■ 일본의 이차보전사업은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에 사용되며, 재해, 국제금융질서 혼란,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재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례가 있음

- 일본은 정부가 JFC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후, JFC에서 지정금융기관(일본개발은행, Shoko Chukin 은행)에 이차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정금융기관에서 사업수혜자에게 저리자금을 대부하는 구조로 이차보전을 시행



【그림 4-4】 대출 보증과 CLO에 의한 유동화, 사채의 보증과 CBO에 의한 유동화

출처: 김혁 외(2004)

주: CLO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BO는 자산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의미

- 일본 JFC의 이차보전사업은 2014 회계연도의 124억 엔을 정점으로 줄어들다가 2021 회계연도에 182억 엔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표 4-3 ■ 일본 JFC의 이차보전(Interest subsidies)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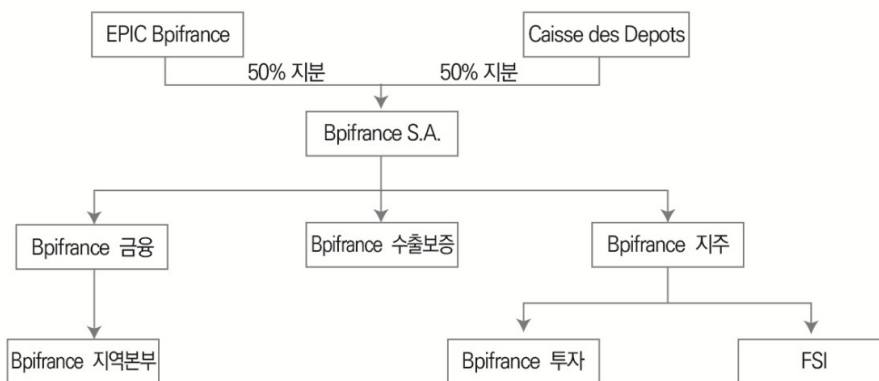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10억 엔)	0.3	2.4	7.8	10.9	12.4	11	5.4	12.6	4.9	2.7	4.6	18.2

출처: JFC(2022)

IV.4 프랑스의 재정융자 제도

■ 프랑스는 공공투자은행(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Bpifrance)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과 관련된 재정융자를 실행

- Bpifrance는 2012년 공기업인 프랑스 혁신청(Office de la Petite et Moyenne Entreprise et de l'Innovation, OSEO)과 프랑스의 혁신 기업에 투자를 담당하는 예금투자공사(Caisses des Depots et Consignations, CDC)의 합병으로 설립
- Bpifrance는 프랑스의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과 관련된 재정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과 기술혁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융자 외에도 수출 보증과 투자 업무를 수행¹⁸⁾



【그림 4-5】 Bpifrance의 지분구성과 조직

출처: 김흥중 외(2018)

주: EPIC은 상업적 성격을 띤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을 의미하며, FSI는 Bpifrance가 투자에 참여하는 프랑스 국부펀드(Fonds Strategique d'Investissement)를 의미

18) 민태선 외(2014), “유럽의 연구혁신정책 조사 및 출연연의 유럽 네트워크 강화방안 연구”, p.71 및 최지선 외 (201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법제화 연구(제2권)”, p.35. 참조.

■ 프랑스는 기업의 파괴적 혁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로드맵을 구축하고, 프랑스의 높은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한 딥테크 계획을 추진¹⁹⁾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혁신로드맵(Feuille de route sur l'innovation) 수립을 통해 기업의 파괴적 혁신 지원, 혁신 지원 제도의 간소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이라는 3대 우선 과제를 제시
 - 기술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산업분야의 성장 및 창출을 위해 AI,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등과 관련된 주요도전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산업기금(FII)에서 매해 1억 5,000만 유로를 투자
 - 100억 유로 규모의 '혁신산업펀드(Fonds pour l'innovation et l'industrie)'와 4억 유로 규모의 '프렌치테크 씨드펀드(French Tech Seed Fund)'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로드맵의 효율적 이행과 감독을 위한 혁신 위원회(Conseil de l'innovation)을 설립
- Bpifrance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딥테크계획(Plan Deep Tech)*을 발표
 - 13억 유로를 투자하여, 창업 촉진, 성장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통한 미래 산업 리더 육성, 혁신 생태계 활성화의 3대 목표를 설정
 - 신생 프렌치테크 장학금 확대, 'i-LAB' 기술 사업 공모전*의 연간 예산 확대, 딥테크 전용 액셀러레이터 신설, 연구자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4가지 지원책 추진

* 프랑스 내 회사를 설립한지 2년 미만인 스타트업 또는 창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6만 유로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
- 2021년부터 프랑스2030(France2030) 계획*을 통해 딥테크 및 제조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

* 프랑스2030은 기술 혁신을 통해 프랑스 경제의 핵심 부문을 디지털 전환하고, 프랑스를 미래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 하에서 총 540억 유로의 투자로, 기초 연구에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혁신 수명 주기 전체를 지원²⁰⁾

19)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 “프랑스 딥테크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p.1.

20)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4), “국가별 ICT 시장동향: 프랑스”, p.9.

- Bpifrance는 프랑스2030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2~26년 기간 동안 23억 유로를 투자*해 스타트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파괴적 기술 혁신을 지원
 - * 총 예산 5억 5,000만 유로를 투자해 딥테크 제조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한 '제1공장 (Premiere Usine)' 공모 추진
 - * 총 예산 1억 5,000만 유로 규모로, 실증사업, 파일럿 플랜트나 생산플랜트를 대상으로 하는 '신산업 융자(prêt nouvelle industrie)'²¹⁾ 제공
- Bpifrance의 국가보증 대출은 연간 실적으로는 2020년 1,111억 유로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세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전개 및 이후 경제 회생 과정과 맞물린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2030 등 적극적인 기업 지원 정책으로 2023년 이후 국가보증 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표 4-4 ■ Bpifrance의 국가보증 대출규모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연간 실적(억 €)	1,110	130	60
누적 실적(억 €)	1,110	1,240	1,290
미상환 금액((억 €)	1,000	970	820

출처: Bpifrance(2023), p.10

21) 프랑스에 등록된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건당 300~1,500만 유로 한도로 10~15년간 무담보 고정금리 조건으로 융자.

IV.5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금융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미국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농업 등의 취약 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용자와 신용보증을 함께 지원
 - OMB의 정책 권고로 대부분 신용 보증의 형태를 통해 지원
 - 직접용자와 신용보증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
- 미국의 재정융자사업은 대통령 직속의 OMB 주도로 일관된 관리체계 아래 운영
 - 엄격한 평가 및 관리 체계: 미국 정부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명확히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타당성을 검토, 이는 정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
 - 투명한 정보 공개: USA Spending 시스템을 통해 용자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
 - 정부 이익 보호: 용자 조건 설정과 이자율 및 수수료 책정 시, 정부 이익 보호와 채무 불이행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 이는 재정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전략
- 캐나다는 BDC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설비투자 및 상업용 부동산 관련 정책금융을 시행
 - 이차보전사업은 신용보증과 결부되어 농업부문에 집중되고 있음
- 일본은 JFC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에 초점을 두고 재정금융을 시행
 - 최근 행정개혁의 추진과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은 재정융자 과정에서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지원대상 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이원적 신용보완체계가 특징적
- 프랑스는 Bpifrance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용자 및 보증, 투자 업무를 수행

- 2018년 혁신 로드맵, 2019년 딥테크 계획, 2023년 프랑스2030 계획 등 일련의 기술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재정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

■ **선진국은 기업의 위기 극복과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재정금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정 금융의 안정성과 보증 확대를 위한 이원적 신용보완제도를 운용**

-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재정금융 관련 장기 시계열을 보면,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융자 및 신용 보증 등의 재정금융을 확대
 - 캐나다와 프랑스는 재정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무이자 장학금 대출 등으로 인적자원 축적 및 고도화 수단으로 활용
- 재정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본은 이원적 신용보완제도를 운용



재정융자·이차보전 운영 및 현황

■ 본 장에서는 기술개발·사업화와 관련이 있는 국내 공공기관의 재정융자사업의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기술·사업화 관련 재정융자사업은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사업은 주로 기술개발(R&D), 사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 성장 등을 목표로 함.

* [표 2-9] 분야별 재정융자사업 분야 중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재정융자사업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농림수산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통신 분야, 환경 분야 등이 여기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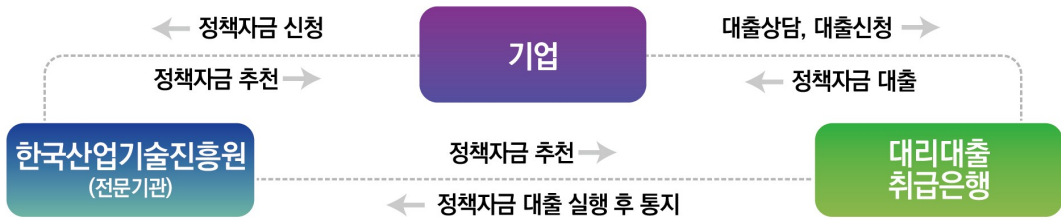
■ 정부의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이나 체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재정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

-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기술·사업화 관련 재정융자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의 운영 및 현황을 검토

V.1 재정융자사업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등을 운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목표로 함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13개 대리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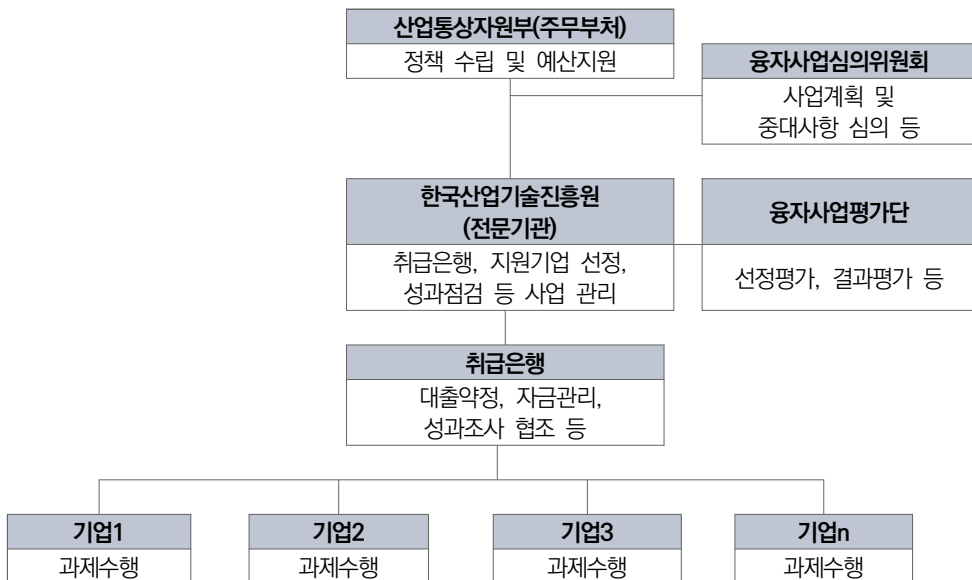
【그림 5-1】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진행 절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4), p2

- 신청자격은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이며,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로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재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보다 2.0%p 차감 적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 예시: 20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그림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체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4), p3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사업과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의 두가지 재정용자사업을 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대상으로 하며, ESCO 투자사업 3,038억 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50억 원으로 총 3,088억 원을 지원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초기 투자비 경감 및 투자 육성을 위하여 신산업 분야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사업은 ESCO 투자사업 3,038억 원, 절약시설 설치사업 50억 원으로 총 3,088억 원을 지원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은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50억 원을 지원

■ 표 5-1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 지원 내용(2022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억 원)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ESCO 투자사업	3,038	150억 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절약시설 설치사업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 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50			
합계	3,08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2)

-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융자센터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을 지원
 - 동 사업의 추진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와 제70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근거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함

- 예산 규모는 2022년 912억 원→2023년 1,470억 원→2024년 2,236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추진체계는 전담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대출 기관 은행으로 구성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하는데, 대출금액은 중소기업은 사업장 당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 기준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에서 지원
- 대출한도는 사업장 당 시설자금 500억 원 이내, R&D자금은 100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대출계약 시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대기업은 1.5%p, 중소·중견기업은 2.0%p 차감하여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 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간접 대출 방식으로 지원
 - 2024년 기준으로 지원사업별 지원규모를 보면, 융자 4조, 4,632억 원, 이차보전 4,943억 원으로, 혁신창업 사업화,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 안정 및 밸류체인 안정화 사업에 지원

■ 표 5-2 ■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

지원사업명	지원목적	지원규모(억 원)	
		재정융자	이차보전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9,958	-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1,894	2,280

지원사업명	지원목적	지원규모(억 원)	
		재정용자	이차보전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4,587	2,663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5,318	-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1,500	-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375	-
합계		44,632	4,94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4), p.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으로 ICT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

- 기술담보대출(융자) 형식으로 124.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ICT 및 ICT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 지원금액 :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20억 원 이내로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 원) 범위 내 지원
 - *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우선 지원(AI, 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 * 기금지출계획에 따른 상반기 예산의 50%인 43억을 6대 혁신기술 분야에 예산 우선 배정
 - 지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3년 1/4분기 : 3.01%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에서 1%p 차감금리 적용
 - * 단, 금리 계속 하락 시 취급수수료 보전을 위해 최저 대출금리를 1.6%로 적용
 - 지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타사항 : 기술 담보 보증서 발급·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 환경산업육성사업과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사업을 시행

- 미래환경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은 환경산업과 녹색전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산업 분야 용자는 시설설치자금과 성장기반자금으로 나뉘어 사업자 당 각각 100억 원, 10억 원의 지원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녹색전환 분야 용자는 사업자 당 10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용자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이 가능한 시설의 신설 및 교체 등에 시설자금을 지원
 - 2024년 기준으로 미래환경산업육성사업 4,200억 원,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사업 800억 원으로 총 5,000억 원을 지원

■ 표 5-3 ■ 환경부 재정용자사업 지원규모 및 조건(2024년 기준)

용자사업	분야	지원분야	총지원규모 (억 원)	사업자당 지원한도 (억 원)	대출기간	대출 금리
미래환경산업 육성사업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1,200	100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 금리
		성장기반자금	1,000	10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1,000	100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대출 시점 고정 금리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1,000	100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분기별 변동 금리
청정대기전환 시설 용자	청정대기	미세먼지시설자금	800	-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미래환경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은 간접대출방식의 용자사업으로,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정책금리로 기업에 용자 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용자 원리금을 수령하고, KDB산업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할 때 이차보전 예산을 활용(수수료를 제외한 용자원리금 + 이차보전 예산)

■ 표 5-4 ■ 환경부 용자사업별 사업방식(2022년)

구분		지원분야	용자방식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간접대출용자
		성장기반자금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간접대출용자+이차보전
친환경설비투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간접대출용자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용자		미세먼지시설자금	간접대출용자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2)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지원 용자지원 사업을 시행

- 용자 운용규모는 총 65억 원 내외이며, 용자 대상은 케이블TV채널 사용 사업자 또는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로 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송출 중이어야하며, 법인 단위로 신청
 - 시중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용자하는 간접 대출 형식으로, 프로그램 제작 자금의 용자 범위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 소요 자금
 - 시설구축자금은 방송영상 촬영 시설(스튜디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등
 - 별도 자부담 요건 없는 개별 대출한도로 각각 프로그램 제작자금은 프로젝트 당 20억 원 이내, 시설구축자금은 프로젝트 당 10억 원 이내
- 용자기간은 프로그램 제작 자금과 시설구축자금 모두 최대 2년으로 1년 거치 후 자율 상환
 - 용자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2.5%로 고정금리이며, 추후 정책 및 시장환경 등에 따라 하향 조정 가능

■ 표 5-5 ■ 방송영상진흥지원 용자지원 주요 내용(2024년)

분야별	대출한도	대출 기간	(최소 거치 기간)	기준 금리	우대금리			이자환급	
					표준계약서 활용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매출감소 기업	일자리 지원기업	매출/수출 증가
프로그램 제작자금	프로젝트별 20억원	2년 이내	1년	2.5%	△0.2%p	△0.2%p	20% 이상 감소시 △0.2%p	1~2명 0.1%p	20% 이상 증가시 0.2%p
시설구축자금	프로젝트별 10억원				-			3명 이상 0.2%p	

성평등 교육 미수료시 0.1%p 가산금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4a), p1

V.2

이차보전사업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기술보증기금의 범부처 정부 R&D 저리융자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

-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를 가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을 지원 근거로 함

[추천기업 선정]

사업공고 (산업부)	추천기업심사 (심사위원회)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대출심사 (취급은행)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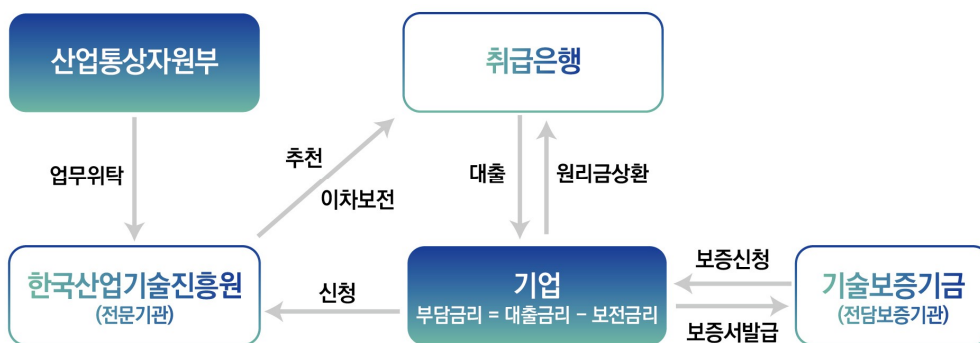
【그림 5-3】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절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2b), p.4

-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전용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

- * 상기 생산설비 설치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건물·부지의 건축 또는 매입자금(단, 건물·부지 단독 자금소요는 제외)
- * M&A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단, M&A투자와 관련 없는 단순 운전자금 성격의 자금소요는 제외)
-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지원방식은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 원으로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으로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 지원금리는 각각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으로 시설자금/M&A자금은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연구개발자금은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기간 동안 지원
- R&D 혁신스케일업 용자(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를 지원 근거로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며,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규모는 125억 원(이자 지원)



【그림 5-4】 혁신스케일업 용자(이차보전) 사업의 추진체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4a), p.6.

- 기술보증기금의 범부처 정부 R&D 저리용자 특례보증은 R&D 용자(이차보전)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담보, 신용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
 - 운영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지원대상은 범부처 정부 R&D 과제 연구비 감액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변경 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 R&D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신청대상 확인서' 보유기업이면서, 이차보전기관이 발급하는 '지원예정 통보서 (중진공)' 또는 '이차보전 추천서(KIAT)' 보유기업



【그림 5-5】 범부처 정부 R&D 저리용자 특례보증 지원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4), p.7

- R&D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보증기간은 5년(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1% 이하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과 정부 R&D 과제비 감액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을 운영

-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 완화
-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표 5-6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편성 현황(2023년)

자금명	지원대상	공급규모 (억 원)
혁신성장지원	최근 3년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기업 중 운전자금 필요 기업	2,800
제조현장 스마트화	• 스마트 공장 추진 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등 • 스마트 공장 등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1,800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민간은행 ESG 금융(대출) 활용중인 기업	800
수출기업 글로벌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	2,570
합계		7,97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3.3), p.3

- ①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사업규모는 2023년 총 4개 자금, 7,970억 원 공급 및 2024년 총 9,243억 원 (일반 4,943억 원, R&D 감액 4,300억 원)

【표 5-7】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2024년)

구분	지원목적	지원규모(억 원)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2,280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2,663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가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합계		4,943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4)

- 정부 R&D 과제비 감액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은 R&D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자금 지원
 - 정부 부처 R&D 2024년 계속·중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협약변경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300원 규모의 지원
 - R&D 용자(이차보전) 확인서 발급은 2024년 정부 R&D 연구개발비 조정 대상 중소관부처와 연구개발비 조정 및 협약변경이 완료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급기관에서 신청
 - R&D 전담기관과 과제 사업비 감액에 따른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5년(3년 거치, 2년 상환)간 최대 10억 원 지원

■ 표 5-8 ■ 이차보전 대출 주요 조건

구분	주요 내용
대출대상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대출한도	연간 5억 원 이내(3년간 10억 원 이내)
대출용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 (3%) 중점지원분야,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 •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기대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합산 기업당 60억 원 한도에서 제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기업진단 생략 가능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3. 3), 저자 재정리

■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으로 취급 금융기관 모집 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을 운영

- 취급 금융기관 모집 사업은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서 낮은 대출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이자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 2023년 242.5억 원(총 대출규모 3.5조 원 이내)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우대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금융기관이 감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제6조(이차보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
 - *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가능 설비 및 공정개선 관련 설비 투자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 지원조건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제7조(이차보전 대상상품 설계 원칙)에 해당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대출 상품
 - * 실수요자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 적용(단,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향 우대)
 - * 검증기관을 통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계획서 제출 의무
 - * 금융기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시점까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이 완료된 시설 유지 의무

- 이차보전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규모 확대를 목표
 -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공정·산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온실가스 감축 할당 대상 업체 및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 142.5억 원의 예산 규모로 이차보전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최대 우대금리는 중소기업 2.6%, 중견기업 2.5%, 대기업 1.4%이며, 최대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00억 원, 중견기업 2,000억 원, 대기업 5,000억 원

■ 표 5-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차보전과 순수이차보전 방식 비교

구분	간접대출용자 + 이차보전	순수 이차보전
방식	민간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 후 기술원이 용자 지원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용자 지원
자금	시중자금(기술원이 차입 조달)	각 은행 자체 자금
금리	정책금리 동일 적용 (2022년 2분기 2.27%)	기업별 신용도에 따른 차등 금리 기업부담금리 = 일반대출금리 - 이차보전을
장점	• 정책금리 일괄적용으로 저신용 영세기업 유리 (금리부담 완화) • 적은 예산으로 용자규모 확대 용이 • 재정부담 경감(이차보전금 예산)	• 재정예산 부담 적음 • 적은 예산으로 용자규모 확대 용이
단점	• 재원조달 산업은행의 사정변경 시 용자재원 확보 불확실 우려(대규모 자금의 장기대출 가능한 타 은행 부재) • 집행기관 실무 가중 • 이차보전금 예산안 산출 어려움	• 우량기업 지원 편중 우려 • 저신용 영세기업 고금리 부담 •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준금리 상향책정 부작용 우려 • 정책목적과 취지에 따른 선정과 사후관리 부실 우려(정책목적 희석)
운영사례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에너지공단 용자사업 벤치마킹)	지자체 및 타기관

출처: 삼일회계법인(2022), p20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은 협약 금융기관 선정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으로 구성

- 협약 금융기관 선정 사업은 협약 체결일 시점부터 2026년 12월 31일(수행 기간 이후 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까지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문화콘텐츠 기업의 운영·프로젝트 제작자금을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 연간 약 2,400억 원 내외 대출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2024년도 예산의 2.5% 이차보전을 적용 기준/전년도 이월액 포함
 - (이차보전 예산규모) 2024년도 약 60억 원 예정
 - (이차보전 대상기업)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용자실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업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업체
 - ②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사업자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 종사자
 -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표 5-10 ■ 보증기금별 이차보전 대상 운영 문화콘텐츠 보증 상품 현황(2023년 기준)

구분	상품명
신용보증기금	•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지원 프로그램(기획, 제작, 사업화 등) • 신한류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 유망서비스 부문 기업(문화콘텐츠형, 소프트웨어형)
기술보증기금	•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협약 보증(일반보증-선도콘텐츠 대상)

출처: 저자 작성

- (기업별 용자 한도금액) 5억 원 이내(창업 및 청년 기업의 경우 10억 원)
- (전산개발)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은행 내부 전산 및 상품개발 등
- (기타) 협약은행 소속 영업지점에 대한 상품 교육 및 지도, 홍보 등
- 추진 일정(안)은 2023년 12월까지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 2024년 1월부터 내부 전산 개발 및 사업 시행으로 기획
- 문화체육관광부의 특화보증(문화콘텐츠기업 보증제도, 2024년)은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를 통한 용자 유치 지원
 - 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기업의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를 대상

■ 표 5-11 ■ 콘텐츠기업 보증제도 상품구성

구분		신청대상 자금		보증한도	보증기간
Ⅰ.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기획보증	콘텐츠 기획자금(콘텐츠 기획·개발단계)		최대 3억 원	최대 5년
	제작보증	콘텐츠 제작자금(제작착수 후~제작완료 전)		최대 5억 원	최대 5년
	사업화보증	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콘텐츠 완성 이후)		최대 10억 원	최대 3년
Ⅱ. 콘텐츠IP보증		콘텐츠IP 활용 2차 콘텐츠 제작·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10억 원 내외	최대 5년
Ⅲ.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기획단계	해외진출/비대면 /신기술융합 콘텐츠	기획자금	최대 3억 원	최대 5년
	제작단계		제작자금	최대 5억 원	최대 5년
	사업화단계		유통·마케팅 자금	최대 10억 원	최대 3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4)

- 신청대상 금액은 운전자금, 기획보증, 제작보증, 사업화보증으로 구분

* 운전자금은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대상

*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 원으로, 콘텐츠기획보증은 최대 3억 원 이내, 제작보증은 최대 5억 원 이내, 사업화보증은 최대 10억 원 이내

■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으로 협약금융기관 선정 및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구성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협약금융기관 선정 공모는 2024~2025년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자금용자·관리를 위한 협약금융기관 선정을 목적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방위사업청 고시)」제4조, 제24조를 지원 근거로 함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2021년)은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하며, 시중 금리와의 이차 차액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

- 방산육성자금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구분되며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은 약 3,000억 원,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추천은 약 500억 원 규모

- 업체 실제 부담금리는 기업대출 평균금리에 따라 다음과 같음

* 기업대출 평균금리 4% 이상 : 중소기업 0.5%(고정), 중견 및 대기업 2.0%(고정)

* 기업대출 평균금리 4% 미만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중소기업), 50%(중견 및 대기업)

- 대출기간은 각각 방산육성 자금은 최대 10년 이내로 하며,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또한 최대 10년 이내이지만, 세부 분야별로 총 대출기간이 상이함

- 방산육성자금은 연구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국산화개발 사업, 방산 유희시설 유지, 방산물자 등 수출, 방산시설 설치 등, 방산업체 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함. 다만, 방산시설 설치의 대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원자재 비축 사업, 방산 유희시설 유지 사업, 방산업체 운영은 방산업체만 지원 가능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사업은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 사업, 군수품 생산시설 설치,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계약업체 생산, 국방 중소기업 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함. 다만,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표 5-12 ■ 방위산업 이차보전 분야별 지원내용 (2021년)

구분	분야	거치기간	총대출기간 (거치기간 포함)	지원한도액
방산육성자금	연구개발/핵심기술/국산화 원자재 비출	2년 이내	5년 이내	소요금액의 100% (한 업체당 총 용자지원 규모의 30% 이내 지원 원칙)
	방산시설 설치 등 방산업체 운영	3년 이내	10년 이내	
	유희시설 유지	2년 이내	7년 이내	
	방산물자 등의 수출	-	최종 수출대금 결제 기일 이후 6개월 가산 기간 이내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개발	2년 이내	5년 이내	
	시설의 설치 등 국방 중소기업 운영	3년 이내	10년 이내	
	계약업체 생산	-	5년 이내	

출처: 방위사업청(2021)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및 한국해운조합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운영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2024 상반기)은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 중 자기부담분 20%를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이자비용의 일부(2%p)를 보전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을 대상
 -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대출 규모가 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 선박으로 선정하고,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함(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 한국해운조합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80% 이내 대출을 받을 시 대출금리 중 2.5%p 이내 지원
 -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업 및 내항화물운송업 면허 보유 해운사 및 선박 대여업자가 신규 건조하는 선박을 대상
 - 2013~2019년간 예산 약 392억 원으로 총 112척(대출액 5,072억 원)을 지원함
 - * 2020년 예산규모는 147억 원으로, 10~15척의 연안여객과 화물선박 지원 예정
 - 대출한도는 2022년 기준 총 500억 원(척당 100억 원 이내)
 - 노후선박 및 친환경선 대체 촉진 계획
 -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기존 노후 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가능

■ 행정안전부는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으로 노후 선박의 대체 자금 대출시에 2.5%p의 금리를 지원

-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금리 중 2.5%p를 지원(2024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을 지원 근거로 하며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 총 60억여 원 규모로 5개 협약은행(산업, 기업, 부산, 수협, 신한)에서 대출 지원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출기간은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로 하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를 융자한도로 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도선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를 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를 지원 근거로 함

-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지원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①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액 환수조치를 받은 자, ② 펀드, ③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자는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대상 자금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구분
 - 시설자금 : ①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개축에 필요한 자금, ② 인증 물류센터의 구입·승계·인수에 필요한 자금, ③ 인증 물류센터로의 고도화를 위한 장비·시설·시스템 등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운영자금 지원 불가)
- 인증등급과 중소, 중견, 대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금리를 지원

■ 표 5-13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금리보전 체계(2021년)

인증등급	중소	중견	계열대기업 등
1등급	2.00%p	1.75%p	1.50%p
2등급	1.75%p	1.50%p	1.25%p
3등급	1.50%p	1.25%p	1.00%p
4등급	1.25%p	1.00%p	0.75%p
5등급	1.00%p	0.75%p	0.50%p

출처: 국토교통부 스마트물류센터(2021)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VI.1

현황분석

■ 국내 공공기관의 재정용자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간접용자(전대방식) 방식으로 재정용자 제도를 시행 중
 - 직접용자
 - * 사례 : 중소기업진흥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 전문기관이 용자 수혜자에게 직접 용자해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불능 발생시 재정 손실을 책임짐
 - 간접용자(전대방식)
 - *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사업 등 대부분의 기관이 간접용자 방식 채택
 - 취급은행 또는 보증기관이 용자 수혜자를 선정하고 신용, 물적담보 또는 보증부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재정 손실을 책임짐
- 공공기관별(정부부처/전문기관)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정용자사업을 운영
 - 공공기관별 지원사업에 따라 용자한도, 용자기한, 용자금리를 달리 운영
 - 또한, 기업의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용자한도, 용자금리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 * 사례 :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 기업규모별 대출금액은 사업장 당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 기준 지원을 차등화(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대출금리도 중소·중견기업은 2.0%p, 대기업은 1.5%p 차감 등 차등화하여 지원
 - 또한, 장애인 고용, 일자리 창출 기업, 매출 및 수출기업에 금리나 이자환급 우대 정책
 - * 사례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진흥지원 융자지원 사업

■ 국내 공공기관의 이차보전사업 운영·현황 분석

● 공공기관별 다양한 형태의 이차보전 제도 운용

- 순수 이차보전

- 취급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용자(신용 또는 물적담보부 대출)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해 주고 정부는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를 해당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방식
- 용자금액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차보전해 주는 방식과 기업규모, 용자금액, 인증등급, 지원업종 등에 따라 차등하여 이차보전해 주는 방식 등 기관별로 특색있게 운영하고 있음

* 사례1 :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의 신시장진출 지원사업과 신성장기반 사업의 경우 지원분야(업종)에 따라 이차보전을 차등화하여 지원(중점지원분야 3%, 그 외 업종 2%)

* 사례2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대출한도와 금리를 차등화하여 지원(중소기업 우대금리 2.6%/대출한도 500억 원, 중견기업 우대금리 2.5%/대출한도 2,000억 원, 대기업 우대금리 1.4%/대출한도 5,000억 원)

* 사례3 : 국토교통부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인증등급별 이차보전 금리를 차등화하여 지원

- 복합 이차보전

- 하나의 사업에서 용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하여 운영

* 사례 :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은 용자, 대기업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

* 사례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사업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의 지원방식 전환

- 동일사업에 대하여 재정용자에서 이차보전, 이차보전에서 재정용자로 전환하여 운영

* 사례 : 장애인고용시설자금용자 이차보전에서 재정용자사업으로 회귀(2017~), 중진공의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한시 운영(2013년 운영 후 2014년 폐기),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사업(2012년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던 이차보전을 2013년부터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

● 이차보전사업을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운영

- 2024년도 정부 R&D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예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300억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5억 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부 정부 R&D 과제비 감액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R&D 혁신스케일업 이차보전사업
- 이러한 R&D 용자(이차보전)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담보, 신용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전용 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하여 운영(특례내용 : 기보증 금액에도 불구하고 2억 원까지 보증금액 산정 특례)

■ 국내 공공기관별 재정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현황

● 소관부처, 공공기관, 사업별 재정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현황

■ 표 6-1 ■ 소관부처, 공공기관, 사업별 재정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현황

소관부처	공공기관	사업명	지원방식						기타
			용자			이차보전			
			직접 용자	대리 대출	보증	순수이차 보전	이차보전 +용자	보증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혁신창업 사업화	○	○	.	.	.	.	지원분야별 이차보전을 차등화
		신시장진출 지원	○	○	.	○	.	.	
		신성장기반	○	○	.	○	.	.	
		재도약지원	○	○	.	.	.	.	
		긴급경영 안정	○	○	.	.	.	.	
		밸류체인 안정화	○	○	.	.	.	.	
		정부 R&D 과제비 감액에 따른 이차보전사업	.	.	.	○	.	○	특례보증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	○	○	.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 지원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	.	.	○	.	.	
		R&D 혁신스케일업 용자(이차보전) 사업	.	.	.	○	.	○	특례보증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	○	.	.	.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	○	.	.	.	.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	○	○	○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	○	○	.	.	.	

소관부처	공공기관	사업명	지원방식						기타
			융자			이차보전			
			직접 융자	대리 대출	보증	순수이차 보전	이차보전 +융자	보증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	0	.	.	0	.	kdb 자금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	0	.	.	.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	.	.	0	.	.	-취급금융 기관 모집 -기업규모에 따라 이차보전을 &최대대출 한도 차등화 지원
			.	.	.	.	.	.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영상진흥재단	프로그램 제작자금	.	0	0	.	.	.	
		시설구축자금	.	0	0	.	.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	.	.	.	.	0	취급금융기관 모집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	.	.	0	.	.	취급금융기관 모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사업	.	.	.	0	.	.	
	한국해운조합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	.	.	.	0	.	.	
행안부	재난안전과 유도선안전협회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	.	.	0	.	.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지원 사업	.	.	.	0	.	.	등급별 이차보전 금액 차등지원

출처: 저자 작성

VI.2 정책적 시사점

■ 사업목적에 맞춰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를 선택적 활용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의 차이
 - 재정용자는 정부가 직접자금을 용자해 주는 반면, 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 재정용자는 정부 재정에서 직접 자금이 나가지만, 이차보전은 정부가 이자 보조금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재정용자는 정부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며, 이는 정부 수입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차보전은 이자 보조금 지급으로 정부의 지출이 발생함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경제상황과 정책목표에 따라 각 제도를 적절히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

■ 표 6-2 ■ 재정용자와 이차보전 제도 비교 및 적용가능 사업

구분	재정용자	이차보전
장점	• 필요자금을 신속하게 제공 •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달성 • 일정한 수익창출 가능	• 간접지원으로 재정부담 완화 • 금융기관 시스템 활용, 용자관리기 효율적 • 기업이나 개인에게 낮은 이자율 혜택
단점	• 정부가 직접 자금을 제공하므로 재정에 부담 • 용자관리와 회수과정에서 관리비용 증가 • 대출부실을 정부가 감당, 리스크 관리 필요	• 지원효과 분산으로 특정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 • 이자율 변동으로 예산 예측 어려움 • 금융기관 의존도 증가
적용가능 사업	•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도로, 철도, 항만 등) • 상업적 성공이 불확실하여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고위험 신기술 개발(초기단계 신기술, 혁신적인 R&D) • 사회적 가치가 큰 프로젝트(공공의료시설, 교육 시설, 환경보호프로젝트 등) • 긴급재난 대응(재해복구 및 복원 등)	• 중소기업 지원 (운영자금, 소규모 시설투자) • 민간투자 유도 프로젝트(예,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친환경 기술도입 등) • 농업 및 지방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출처: 저자 작성

■ 재정융자·이차보전사업에 공적 보증 제도 활용²²⁾

- 공적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와 금융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정부입장 :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융자를 실행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회수 리스크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공적보증이 필요
 - 중소기업 입장 :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워 자금 융자가 힘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적보증이 필요
 - 민간금융기관 입장 : 민간 금융기관은 여신 기준을 충족할 때만 융자가 실행되며,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모두 부담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적보증이 필요
- 따라서,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사업에 공적보증 확대를 통해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 가능
 - 공적보증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완화하여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사업의 효과(특히, 융자대상 확대 및 다변화)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부 재정지원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융자와 이차보전을 특색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 기업의 규모, 성과,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정부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업의 다양성과 정책목표를 반영한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함
- 기업규모 및 성과 연계 지원 제도 추천
 - 중소기업은 재정융자, 대기업은 이차보전 제도로 적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간 융자규모, 융자기간, 이자율 또는 이차보전율을 차별화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
 - 정책목표 달성정도가 높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재정융자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수출 인증 레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22) 삼일회계법인(2022), “재정융자제도 및 이차보전 전환사업 분석”, 참조.

참 고 문 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공고 제 2023-0292호, 2023년도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 공고”.
- 국토교통부 스마트물류센터(2021), “2021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 김선옥(2018),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 김지영·박상원(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혁 외(2004), “재정융자제도 및 보증제도 - 외국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홍중 외(2018),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24a), “2024년 상반기 방송영상진흥지원 융자지원 사업 공고(1차)”.
- 문화체육관광부(2024b), “2024년 콘텐츠 특화보증(K콘텐츠혁신성장보증) 공고”.
- 민태선 외(2014), “유럽의 연구혁신정책 조사 및 출연연의 유럽 네트워크 강화방안 연구”, 한-EU 연구혁신센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박정화(2023.11), “재정융자사업 관리현황 및 개선과제”, 한국재정정보원.
- 방위사업청(2021), “2021년 방위사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 법제처(2023), “법령 입안 심사 기준”.
- 산업자원부(2022a),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에너지 및 특별회계 운용요령”.
- 산업통상자원부(2022b),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2024a), “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2024b), “2024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 삼일회계법인(2022), “재정융자제도 및 이차보전 전환사업 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서대훈(2019), “개발금융기관의 현황 및 선진국 개발금융기관의 변화”, 산은조사월보,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윤경수(2017), “일본 대내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추진 동향 및 시사점 - JFC·DBJ를 중심으로”, 산은 조사월보,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이장욱(2020),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적 제약에 관한 연구: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0-13, 한국개발연구원.

- 임소영(2014), “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 확대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4), “국가별 ICT 시장동향: 프랑스”.
-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2023.3),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개시”.
- 중소벤처기업부(2024), “공고 제2024-351호, 2024년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공고 (수정)”.
- 중소벤처기업부(2024), “공고 제2024-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 “프랑스 딥테크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 해외 중소기업 정책 동향, Vol. 5, No. 2, 2022-2호.
- 최지선 외(201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법제화 연구(제2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태정임(2009), “융자사업의 성과관리-재정사업자율평가 유형별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재정정보원(2019),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 한국재정정보원(2023), “2023 주요 재정통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2), “공고 제2022-104호, 2022년도 6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공고”.

〈영문자료〉

- Bpifrance(2023), “Debt Investors Preseattation”.
- JFC(2022), “2022 Japan Finance Corporation Annual Report”, p.56. Results of operations to facilitate crisis responses.
- The White House(2023),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3”.

〈홈페이지〉

-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 법제처 <https://www.law.go.kr>.
-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
- 정부24시 <https://www.gov.kr/portal/orgInfo>.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캐나다 긴급비즈니스 회계 프로그램 <https://ceba-cuec.ca/en/overview.htm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융자센터 <https://kicox.or.kr>.

한국재정정보원 <https://www.fis.kr>.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https://fis.kr/ko/major_biz/dbrain_oper/main_func.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s://www.keiti.re.kr/>.

해양진흥공사 <https://www.kobc.or.kr/>.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https://www.konetic.or.kr/loan>.

저 자

- 정문교 - (주)그립 전략기획실 이사
- (전)기술보증기금 부장
- mchung9328@hanmail.net
- 한상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
- syhan@kiat.or.kr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4 산업기술정책 이슈페이퍼

발 행 일 2024년 10월
발 행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발 행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기획/진행 배진희 실장, 한상영 책임연구원(syhan@kiat.or.kr)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산업기술정책단 정책기획실
02-6009-3000
www.kiat.or.kr
ISSN 2092-657X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내 공공기관의 재정용자·이차보전사업 운영·현황